

광양제철소 고로 개방 행정처분 안해 눈총

전남도, '조업정지' 사전 통지했다 내부종결 바꾸기? 오락가락 행정·철강업계 반발 밀려 소극 대응 비판도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에 설치한 안전밸브(블리더) 무단 개방과 관련,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예고했던 것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치밀한 검토 없이 처분을 내려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 뿐 아니라 철강업계의 반발에 떠밀려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눈총까지 받게 됐다.

전남도는 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블리더 개방과 관련,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내부종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민·관 협의체 결정, 법제처, 환경부 및 고문변호사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휴풍(休風)을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

하고 '행정처분 사유 부존재'로 판단, 내부종결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에 통보했다.

전남도는 "1998년 당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영산강환경영향에 대기 블리더 설치 허가를 받으면서 이상 압력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위해 개방한다고 신고했고 휴풍도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사·도지사가 인정한 경우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화재나 폭발 같은 사고 방지 목적으로 사·도지사가 허가한 경우에 블리더 개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지난해 9월 마련한 개선방안도 반영됐다. 환경부 등은 블리더 개방 공정개선,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변경신고를 하면 블리더 운영 과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가루 투입을 휴풍 3시간 이전에 조기 중단하고 기존 풍압(300-800g/cm)을 낮춰(100-500g/cm)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블리더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는 2024년까지 대기배출물질 저감에 7000억,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환경개선 투자계획도 반영됐다.

하지만 전남도가 지난 4월 블리더를 개방,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확인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지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데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거세다. 당시만 해도 전남도는 "블리더는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폭발·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데 휴풍(休風)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장치가 없는 블리더를 '인위적'으로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시켰다"며 행정처분을 당연한 조치로 추진했었다. 전남도는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0년 전에 영산강환경영향에 신고한 사실조차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된다. 전남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폭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 공정이 아니라 유권해석을 내렸던 고용노동부나 환경부도 애초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철강업계의 반발에 밀려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블리더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입장을 낸 이후에도 3개월 가까이 처분을 미루다가 지난해 마지막 날 내부종결 처분한데 대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는 말도 나온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27일 광양시 대시민보고회를 갖고 시설 개선방안,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부 민·관 협의체 개선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강진·진도군 선정

국비 84억 확보 주민 밀착형 시설 확충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서 강진군과 진도군이 각각 선정돼 국비 84억원을 확보해 주민 밀착형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됐다.

전남도는 2일 "전국적으로 12곳이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서 전남도내에서는 강진과 진도가 각각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강진군 '맘 편한 센터 조성'과 진도군 '활력이 넘치는 옥주골 만들기'다.

강진군 '맘 편한 센터 조성'은 강진읍 서성리 일원에 생애주기 맞춤형 영유아 돌봄공간, 청소년 창업센터, 장노년 공공체육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진도군 '활력이 넘치는 옥주골 만들기'는 아이돌봄센터, 문화체험마당, 주차장 등 핵심거점공

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국비 84억원과 지방비 56억원 등 총 140억원을 들여 지역민 삶의 질 개선과 공동체 회복, 도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전남도는 중앙 공모 선정에 대비해 지난 11월 1달 동안 가이드라인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난 2019년 11월 새로 신설된 사업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됐으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소규모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에서도 목포시 용당동 '응답하라 1980 동목포 레일플랫폼', 목포시 삼학동 '지구를 차갑게, 목포를 아름답게, 삼학동을 푸르게' 등 2곳이 선정된 바 있다.

전남도 청년 창업농 175명 선발

영농정착금·창업자금 지원

전남도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청년 창업농 175명을 선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 청년 창업농이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영농정착 지원금은 경영비나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협 청년농업

희망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 유지,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전남도는 현재 497명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농자금,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금 취지에 맞는 자금 사용 여부와 의무 이행 사항 점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바라는 청년농업인은 22일 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동구 만들자 2일 오전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임택 청장과 공직자들이 '쓰레기 없는 원년'을 선포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광주 체육계 정치화 우려 커진다

5개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 정치인 대거 출마 수사기관 조사받는 인사까지 준비...자질 논란

광주지역 일선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에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전초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19년 12월 26일자 1면)과 관련해 '지역 체육계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인사까지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자질 논란도 일고 있다.

2일 광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오는 15일 일제히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지만 일부 정치인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번 체육회장 선거가 2년 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은 동구체

육회 전진기 전 시의원, 북구체육회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의장과 이상동 전 광주시의원 등이다.

또 서구체육회 선거는 서대석 현 청장과 임우진 전 청장의 지인들이 나서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 가운데 북구 체육회장에 출표를 던진 한 후보자는 지난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대회출전 선수 등 사망 2명, 부상 25명 등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의 한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한 특혜성 조례 제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

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후보 등록에 앞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일부 후보는 최근 체육회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로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했고, 또 다른 후보들도 체육회 관계자들을 발 빠르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거 각종 선거 경연이 많은 정치인 출마가 잇따라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체육회장 선거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해 향후 법적 분쟁사태의 여지도 많다는 게 문제다.

광주시 체육회 관계자는 "5개 자치구 체육회에서 각각 선발한 200여명 안팎의 대의원 투표로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불법·탈법 선거로 얼룩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나현 제명...결원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최미정 승계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된 나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 광주시의회 의원의 자리가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민주당 비례대표 3순위인 최미정(50·사전) 민주당 화동일자리문화의 자문위원을 나현 의원의 후임으로 결정하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1순위인 나현 의원은 지난달 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의결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순위는 청년 대표인 최영환 현 의원이다.

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선관위에 의원결원 사실을 통보했다. 결원 의원 승계자

결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조만간 나현 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 변동 가능성이 있다. 나현 의원은 제명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14일 법원에 제명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나현 의원은 일단 복귀하고 후임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